노동자 연대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wspaper.org

제275호 | 2019년 2월 14일 ~ 2월 20일 | 값 1,000원

ISSN 2005-8217

발행인 : 김인식 편집인 : 김인식 사업자 명칭 :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 노동자 연대 발행 연월일(창간호) :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 (주)아이피디 이병동 등록번호 :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 02-777-2792 팩스 : 02-6499-2791
제보 : 02-777-2791 E-Mail : ws@wspaper.org

사진 조승진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중단하라

대규모 인력 감축과 노동자 조건 악화를 낳는다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
단호한 점거 파업과 학생들의 연대로 승리를 거두다 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2면

베네수엘라 사태와 라틴아메리카 우익의 부상 4~5면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2면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3면

서평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 파시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7면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강동훈

사진 출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청년들에게도, 노동자들에게도 나쁜 광주형 일자리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이 조직돼야 한다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에 협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것은 현대차 사측이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약 5년 동안)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가 노조 할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가 현대차 사측과의 협상에서 이 조항을 빼 한국노총을 달래려 하자, 현대차 사측이 강하게 반발해 합의가 무산됐던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되살아났다. 일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고는 하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이에 합의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양보를 강요하는 구실을 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저질 일자리라는 문제는 여전하다. 정부는 평균 연봉 3500만 원이니 나쁘지 않은 일자리라고 말하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연봉 3500만 원이 안 된다. 매월 16시간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것인데다, 임금이 높은 관리자들을 포함해 평균을 낸 것이므로 생산직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은 2000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고용난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모델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정부가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일자리가 왜 고작 저질 일자리여야 하는가?

지난해에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25조 원 더 걷혔고, 세금이 10조 원 넘게 남았다. 지지난해에도 세금 10조 원이 남았다. 정부가 세금 수입 예상을 매우 인색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긴축 정책을 펴 온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돈을 사용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쓰려고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빈 껍데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또, 정부는 임금 · 조건 하락 없는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추진해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다. 그런데 되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2월 중에 합의하라고 경사노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민정 합의

이처럼 저질 일자리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가 임금 격차 해소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대해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 · 조건을 하향평준화하려고 한다. 벌써부터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경제 위기에서 기업주들의 이윤을 회복하려고 제조업 전반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광주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산업 위기를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임금 · 저생산성 때문에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이 감소해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이 멕시코에도 밀렸다', '르노삼성의 임금 투쟁 때문에 닛산 로그 위탁 생산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등등의 주장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위기는 노동자들 탓이 아니다. 자동차 산업 위기는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관세 전쟁, 그리고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과잉 설비 문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가들의 이윤 경쟁의 결과이다. 이런 책임을 노동자들이 져야 할 이유는 없다.

한편,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번 합의가 임금은 양보하고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는 노사민정 합의의 성과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직후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조건 양보를 강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금속노조와 현대 · 기아차지부 지도자들은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맹비판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그것의 추진에 제동을 걸만한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부문의 노동자들은 사측에 압박을 가하고 정부의 저임금 일자리 양산 정책에 제동을 걸 힘이 있는데도 말이다.

현대차 ·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협약이 체결된 직후 사측에게 '광주형 일자리 관련 특별고용안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측이 고용안정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간을 끌어 투쟁의 김을 빼는 일일 뿐 아니라, 고용안정만 보장되면 임금 · 노동조건 하향평준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감아 줄 수 있다고 밝힌 셈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개악 등으로 저임금 일자리 양산을 추진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노동 개악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전반적인 친기업 · 반노동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시급히 조직돼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 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2007~2008년 금융 공황이 세계경제에 10년 넘도록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그런 점에서] 1월 31일 미국 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이사회의 기준 금리 동결 결정은 중요한 경제 소식이었다.

이것은 매우 두드러진 '무사건'(無事件)으로, 셜록 홈즈 추리소설로 치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에 개가 짖지 않아서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단서가 되는] 흥미로운 사건" 같은 일이었다. 이를 이해하려면, 주요 자본주의 경제들이 지난 금융 공황으로 촉발된 대침체에서 벗어난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간단히 말해, 당시 주요 자본주의 경제들은 신자유주의 교리를 무시하고 곳간을 열어젖혔다. 정부에서 추가 지출을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친기업 언론과 [정부 지출 덕에] 목숨을 부지한 은행들은 이를 "국가 부도 위기" 상황으로 탈바꿈시키는 교활한 정치적 술수를 부렸다.

그 결과 공공 지출 삭감을 목적으로 한 긴축 조처가 도입됐다. 그래도 경제 상황은 너무 허약해서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는 경제가 유지되기 어려웠다. 신자유주의 시절 통화 발행과 금리 설정 권한을 되찾았던 중앙은행들이 그 부담을 짊어졌다.

그 결과 "통화정책적 행동"은 주로 양적완화 형태를 띠었다. 각국 중앙은행은 민영은행들에서 국채와 기업채를 사들임으로써 금융 부문에 돈을 사실상 쏟아부었다. 그래서 민영은행들이 그 돈을 투자처를 찾는 기업들에 대출해 주게끔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각국 중앙은행은 새로운 조처들을 시행했다. 예컨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해 은행들이 돈을 쟁여 두고 있느니 빌려 주게끔 하는 것 같은 일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통화 정책은 빠르든 늦든 간에 언젠가는 반드시 "정상화"될 것이었다. 다시 말해, 금리는 위기가 정점일 때 설정된 초저금리 상태에서 다시 오를 것이었고, 양적완화는 끝날 것이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생각이 깔려 있었다.

첫째, 금융 공황과 대침체는 근본에서 건전한 자본주의 체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현상이라는 가정이다. 일단 침체 효과가 끝나면 신자유주의적 "정상 상태"가 되돌아올 것이었다.

둘째, 주류 경제학의 핵심 이론인 화폐수량설이다. 이것은, 통화량을 너무 빨리 늘리면 큰 폭의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많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양적완화 때문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연준 이사회가 거듭 깨달은 것처럼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했다. 2013년 당시 연준 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가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하자 금융 시장이 요동쳤다. 소위 "긴축 발작"이었다. 버냉키는 재빨리 물러섰다. 버냉키의 후임 자넷 옐런은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을 동시에 추진했으나, 2016년 중국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면서 옐런은 이 정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연준 이사회 의장을 제롬 파월로 교체했다. 그런데 파월이 옐런의 정책을 계승해 금리를 조금씩 인상하자 트럼프는 격분했다. 연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만기가 됐을 때 재구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연준이 금융 시장에 신규 자금 투여[양적완화]를 중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연준의 이런 정책 때문에 2016년 대선 때부터 계속됐던 미국 경제 성장 거품이 꺼질까 겁에 질렸다. 그러나 연준의 정설 경제학자들은 실업율이 하락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올라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다시 그것이 물가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사실, 물가 인상 역시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에 짖지 않은 개"다. 물가인상율 통계는 각국 중앙은행의 예측치(대체로 2퍼센트)에 못 미쳤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각국의 실업율 통계치가 실질실업율에 못 미치는 것 때문이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아예 포기해 실업율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파월이 금리 동결을 유지하며 제시한 핵심 이유는 세계경제의 "교차 흐름" 때문이었다. 미 · 중 무역 전쟁 심화의 여파, 유로존(2018년 4분기에 유로존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과 중국 경제의 둔화, '하드 브렉시트' 시 예상되는 경제적 충격 등.

그러나 근본적 진실은, 세계 자본주의는 여전히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를 깊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가의 도움 없이는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좌파 경제학자 제임스 갤브레이스가 말한 "정상 상태의 종말"이다.

번역 김준효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정선영

사진 출처 청와대

"요즘 내가 현대 수소차 홍보모델"이라는 문재인 정부는 수소차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부추기지만 '신 산업'이라는 환상이 무너진 사례는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수소차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1월 17일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현재 누적 생산량이 고작 2000대인 수소차를 2040년에는 620만 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중 내수용은 290만 대인데, 현재 국내 자동차 수가 2300만 대임을 고려하면 수소차를 자동차 시장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정책으로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수소차가 친환경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수소차는 차체 내에서 수소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이용해 작동한다. 그래서 다른 전기차처럼 배기가스가 없을 뿐 아니라 수소와 결합시키기 위해 대기 중의 산소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심 미세먼지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환경단체들이 지적하듯,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수소를 추출하는 데에 막대한 화석 연료가 쓰이기 때문이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도 전기가 필요하고, 지금은 전기 생산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또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하고, 새어 나가지 않게 저장하는 데도 화석 연료가 쓰인다. 게다가 핵 발전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수소 생산을 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이는 친환경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방안이다.

요컨대, 화석 연료와 핵발전에 의존하는 현재의 전기 생산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수소차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도박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수소차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환상을 부추긴다. 울산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보고회에서 문재인은 수소차를 육성해 "경제의 성장판"을 열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문재인이 울산을 다녀가고서 며칠 뒤 민주당 소속 울산시 의원인 이상헌은 현대차 사측과 노동조합을 잇달아 만나며 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협력을 강조했다. 결국 수소차 육성 정책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노동자가 협조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소차는 전망이 불투명해서, 정부와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일본, 중국, 독일도 수소 경제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여기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경쟁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성장을 이끄는 '신 산업'이라던 환상이 모래성처럼 무너진 사례는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다.

예컨대, 1990년대 말 '신경제 호황' 때 IT와 통신업계에 막대한 투자 붐이 일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광케이블이 약 6200만 킬로미터나 깔렸는데, 이는 지구를 1566번 감을 수 있는 길이였다. 그러나 IT 투자 붐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은 2000년대 초 거품 붕괴로 드러났다.

게다가 수소차보다 먼저 대중화가 시작된 전기차도 심각한 수익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알려진 테슬라는 매해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정규직 7퍼센트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전기차도 현재의 경기 불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게다가 컨설팅 기업인 알릭스파트너스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동차 산업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3년까지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의 연구 · 개발비를 포함한 자본 지출은 2550억 달러(약 28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8년간 전기차 시장에 투자된 총비용 250억 달러(약 28조 원)의 약 10배나 되는 돈이다. 이처럼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지만 이들의 수익성은 사실상 제로이거나 마이너스 수준이다. 현재 전기차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유지되기 힘든 상태다.

마르크스는 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실제 가치를 만들어 내는 노동에 대한 상대적 투자가 줄어들수록 이윤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기차처럼 기술 투자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자본가들이 수익성 때문에 고전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지적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각국 정부들의 지원 속에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성장하는 전기차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고, 시장을 선점해 기회를 잡으려고 손해를 감수하며 투자하고 있다. 이런 투자가 향후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이는 당장은 '신 성장'이라는 장밋빛 꿈을 실현시키기보다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투자 부담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 전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미국 기업 제너럴모터스(GM)는 북미에서만 노동자 1만 4000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투자는 강화했다.

투자 비용 회수

정부가 특별히 수소차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세계 1위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수소차 투자에 소극적인 동안, 현대자동차는 수소차에 투자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졌지만 수소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은 한 대에 약 7000만 원인 수소차 판매를 위해 대당 35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한 곳을 짓는데 30억 원이나 드는 수소차 충전소 건립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현대자동차만이 수소차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이런 국가의 지원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생생한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수소차에 들인 막대한 비용을 노동자 쥐어짜기로 벌충하려 할 것이다. 정부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 삭감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했듯이 말이다. 만약 그들이 도박에서 실패한다면 그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전가될 것이다.

물론 이런 점들이 우려되므로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반대하고 기존 화석연료 체제를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술 개발도 자본주의 경쟁 논리에 따라 벌어진다면 그 비용과 실패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 일각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운동도 전기차나 수소차 등 미래차 육성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본주의에서 산업 경쟁력 논리는 결국 수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져,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한 경쟁적 축적이라는 핵심 동학 때문에 이윤율이 저하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 논리에 노동자들이 기대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노동계급은 산업 발전이 아니라 임금 · 노동조건 · 일자리 · 정치사회적 권리 등 삶의 필요라는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근본에서 변혁하는 것이 노동계급의 삶 개선을 위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노동자 투쟁이 확대될 때 진정으로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과 그 기술을 대중의 삶을 위해 활용할 방법이 발전할 여지도 커질 것이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 물 건너가다

★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그 이후

★ 인천공항에 갇힌
루렌도 가족 난민을 방어하라

★ 한국당의 5·18 망언과
그 역풍으로 본 현 정국

★ 3·1절 사면 대상에
양심수 포함하라

★ 제주 영리병원 철회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 미세먼지와 자본주의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자처한 친미 우파 후안 과이두 지지 시위대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

라틴아메리카 우파의 부상

알리스터 패로우

라틴아메리카 좌파가 지난 20년 동안 거둔 성과를 되돌리고자 대륙 곳곳에서 우파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 1990~2000년대의 대중운동과 봉기 덕에 [라틴아메리카에서] "핑크 물결"에 속한 좌파 정부들이 집권했다.

이 정부들이 '21세기 사회주의'를 말하며 자유 시장 충격 요법[신자유주의]에 저항하자, 부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전세계 좌파들이 영감을 받았다.

이제 우파들은 권력을 되찾을 기회가 왔음을 감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최대 국가이자 정치적으로 중요한 국가인 브라질에서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집권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구실을 했다.

만약 베네수엘라에서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가 좌파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끌어내리는데 성공한다면 베네수엘라는 브라질과 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 미국이 후원하는 독재자가 집권하고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렸던 암울한 시기가 다시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다른 곳에서도 우파가 전진하고 있다.

게다가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에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기도 하다. "핑크 물결"의 한복판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 에콰도르는 매우 의식적으로 개혁 정책을 외면해 왔다.

에콰도르 대통령 레닌 모레노는 대규모 사업가들과 "인민 대중"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레노는 이웃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적 위기를 피해 도망쳐 온 난민들이 에콰도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을 걸어잠그고 있다.

한편,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서방 제국주의 열강이 볼리비아의 천연자원을 수탈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모랄레스가 천연가스 다국적 기업들에 맞선 토착민들의 대중 운동 덕에 집권했음을 생각한다면 이는 특히 모순적인 처사다.

최근 모랄레스는, 볼리비아 남부 광업 도시 포토시의 염수호 우유니에서 리튬 2100만 톤에 대한 채굴권을 독일계 기업 ACI시스템스에 내 줬다.

지금 라틴아메리카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대륙 전역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거대한 투쟁을 벌였던 20세기 후반과 현저히 다르다.

이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이 집권할 수 있었다. 미국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 운동이 좌파 정부 집권을 추동한 것이다.

대중 운동

당시 대중 운동은 친미 독재자를 대체한 정치인들이 공약을 어긴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1989년 칠레 군 장성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이 퇴진했을 때, 사람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격이 계속됐다.

브라질의 우파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진 출처 Marcello Camargo/Agência Brasil

형편 없는 처지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올 것이라는 거짓 약속에 넌더리가 난 사람들도 저항에 나섰다.

1989년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즈가 집권했다. 페레즈는 선거 운동 기간에 국제통화기금 IMF의 신자유주의 독재를 종식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는 집권하자마자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을 재개했다.

유가와 교통비가 급등하자 수십만 명이 저항에 나섰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와 주변 위성도시들에서 '카라카소'라고 알려진 대중 봉기가 분출했다.

1990년에 에콰도르에서 대중 항쟁이 이어졌고, 1994년에 멕시코에서는 사파티스타 봉기가 분출했다. 이러한 대중 운동들이 "핑크 물결" 정부 집권의 배경이 됐다. 대중 운동이 없었다면 이들은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또다시 저항이 벌어졌다. 베네수엘라 군부 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파벌이 좌파적 대통령 우고 차베스에 대해 쿠데타를 감행하려 했다. 베네수엘라인 수십만 명이 차베스의 석방을 요구하며 빈민가에서 대통령궁까지 행진했다.

군대는 대중의 힘에 눌려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2000년에 볼리비아에서는 수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두드러졌다.

2003년 볼리비아에서 벌어진 소위 "가스 전쟁" 당시 사람들은 천연가스 국유화를 요구했다. 이는 거대한 운동으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볼리비아 전역에서 도로를 봉쇄하고 [정부와] 대치했다.

결국 당시 볼리비아 대통령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는 권좌에서 쫓겨났다. 당시 부통령 카를로스 메자가 후임 대통령이 됐지만, 메자 역시 압력에 밀려 사임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회주의자 에보 모랄레스가 다국적 기업의 천연자원 채굴 반대 공약을 걸고 2005년 대선에서 낙승했다.

"핑크 물결" 정부들이 집권하는 동력이 됐던 대중 운동과 그 정부들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복잡했다. "핑크 물결" 정부들은 당선 후 대중 운동의 사기를 꺾곤 했다.

라틴아메리카 문제를 연구한 미국인 교수 존 베벌리는 이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모순의 핵심을 이렇게 지적했다.

"'핑크 물결'로 집권한 정부들과 이들을 권좌에 올려 준 공식적 · 비공식적 사회 운동 사이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가?

"사회 운동이 국가를 장악하는가? 아니면 사회 운동이 국가에 포섭돼 운동이 애초에 지녔던 급진적 동력과 가능성이 제약을 받게 되는가?"

우파의 부상에 저항할 시간은 아직 있다. 그러기 위해선 대중 운동으로 돌아가, 자본주의 국가를 길들일 수 있다고 보는 좌파 개혁주의 정치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오직 라틴아메리카 노동계급 투쟁으로만 우파를 몰아붙이고 사장들에 맞서 싸울 수 있다.

"핑크 물결" 프로젝트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핑크 물결" 정부를 대안이라고 봤던 세력들은 이 정부들이 실패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서 혼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노동당 예비내각 재무장관 존 맥도널은, 석유 의존적 경제를 다각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물론 산업 다각화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으나, 산업을 다각화했다 한들 세계 경제 위기의 파도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21세기 초 원자재 호황 덕분에 "핑크 물결" 정부들이 사회 개혁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석유 · 천연가스 · 콩 등을 수출해 얻은 수익 일부를 빈곤을 완화하는 데에 사용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가 집권한 1998년에는 14.5퍼센트였던 실업률이 2011년엔 7.8퍼센트로 낮아졌다.

브라질도 베네수엘라와 비슷하게 대규모 재분배 정책을 추진했다.

이 모든 개혁 정책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쟁취한 실질적 조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를 비롯한 다른 ["핑크 물결"] 정부들은 자본주의 사회 관계는 그대로 둔 채로 개혁 조처들을 시행했다.

차베스는 부자들을 전면 공격하기보다는 지배계급과의 사회적 평화를 추구했다. 차베스는 석유 수출 수익으로 진보적 사회 개혁 정책의 재원을 충당하는 한편, 국가 자산을 민영화했고 국영석유기업 PDVSA의 통제권을 군부에 넘겼다.

모순

[21세기 초] 원자재 호황의 배경에는 중국 경제 급성장으로 인한 [원자재] 수요 급증이 있었다. 하지만 2007년 경제 위기 이후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자, 특히 라틴아메리카가 타격을 입었다.

경제 위기는 2015년경에 대륙 전체를 강타했다. "핑크 물결" 정부들이 추진한 개혁 정책을 실행할 물질적 기반이 동나기 시작했다.

각국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했다. "핑크 물결"과 가장 느슨하게 연결돼 있던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노동자당(PT) 정부는 빈민들을 공격했다. 호세프 정부는 토착 농민들이 아닌 지주들을 우대하는 법을 도입하고 실업 보험의 문턱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모순이 매우 재앙적인 방식으로 터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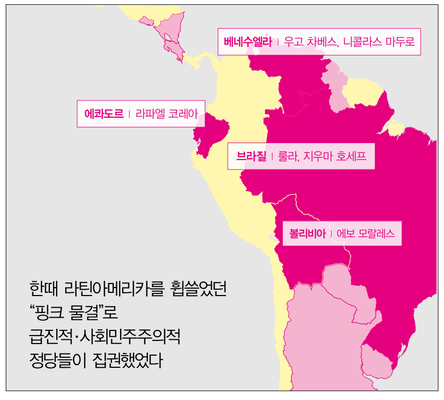
마두로 정부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해외 자본에] 개방해 왔다. 마두로 정부는 다국적 기업 159개가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과 합작해 아르코 미네랄 주(州)에서 각종 광물 · 석유 · 천연가스 채굴할 수 있도록 했다.

마두로 정부는, 사장들이 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르코 미네랄주를 군부의 관할 하에 둠으로써 이 지역에서 헌법적 권리 집행을 유보하기도 했다.

'카라카스 캐피털 마켓츠'의 CEO 러스 댈런은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익을 호시탐탐 노리는 탐욕스러운 기업가 중 하나다. 댈런은 이렇게 말했다. "금고가 비어 있어도 석유 · 금 · 천연가스는 여전히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채권 보유주들과 IMF는 앞으로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배계급이 마두로를 파멸시키려 하는 지금도 마두로는 그들과 계속해서 타협하려 하고 있다.



마두로는 미국과 후안 과이도 모두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거듭 요구했다. 심지어 마두로는 여당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SUV)이 멕시코 · 우루과이의 중재 하에 우파 야당들과의 회담에 나서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마두로의 권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던 2014~15년에도 이와 비슷한 회담이 잡힌 바 있다. 당시 우파 야당은 회담 하루 전날에 꼬리를 말고 도망쳤다.

쿠데타와 제국주의의 개입을 막기 위해선 지배계급과 그들을 후원하는 제국주의자들이 가진 권력을 분쇄하려 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좌파가 자본주의에 타협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 준다.

'21세기 혁명'

"핑크 물결" 정부는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주의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모두에 대한 대안이라고 찬양 받았다.

차베스는 좌파가 권력을 장악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핑크 물결"을 묘사하며, 이를 "21세기 사회주의" · "21세기 혁명"이라 칭했다.

하지만 실제로 차베스가 추구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를 이용해 위로부터 사회를 바꾸려 하는 개혁주의 전략이었다.

여당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SUV) 안에는 좌파부터 우파까지 여러 정치 경향이 혼재돼 있다. 당 지도자들 중 몇몇은 후안 과이도와 만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했다.

차베스 정부 시절 외무부 차관과 대통령 외교정책보좌관을 역임했고 마두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테미르 포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차비스타'[차베스 지지 · 계승 운동]는 굉장히 독특한 운동입니다. '차비스타' 안에는 민간 부문[대중 운동]도 대규모로 존재하지만, 군부가 이 운동에 매우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사회 안에서 두 세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탁월했다.

포라스 역시 PSUV와 우파 야당 사이의 협상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차베스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를 전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탓으로 돌린다.

미국의 제재가 끔찍한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엔조사위원조차 이를 대중에 대한 "경제적 범죄"라 규탄했을 정도니 말이다. 그러나 상황을 이렇게 만든 마두로의 정치적 실책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정적으로, 마두로는 자본가 자산 몰수, 산업 · 금융 국유화 같은 전투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이 같은 정책들을 집행한다는 것은, 수많은 평범한 베네수엘라인들을 위해 사장들과 자본주의 국가와 정면 충돌한다는 뜻이다.

베네수엘라에 아직 기회가 있다. 하지만 차베스 식 개혁 전략으로는 체제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40호 / 번역 한가은

쿠데타 사주하는 미국
그러나 중국은 믿을 수 있을까?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로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를 지원하며 마두로 정부를 향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월 28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 자산 동결 등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가해 베네수엘라 경제를 더한층 수렁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이 제재는 미국이 40년 전 칠레 혁명을 무너뜨리기 위해 칠레산 구리에 가했던 경제 제재와 거의 같은 내용이기도 하다.

이어서 2월 6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과이도 정부를 인정하는 베네수엘라 고위 군 장교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고려 중"이라며, 국영석유기업 운영 등에서 마두로 정부와 긴밀히 연계된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이도에 반대하고 마두로를 지지해 온) 군부를 흔들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과이도를 지지하며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00만 달러어치를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은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해 온 오랜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파를 밀어주려 생필품 수급조차 어려운 베네수엘라인들을 볼모 삼고 있는 것이다.

과이도는 (현재 베네수엘라-콜롬비아 국경에 있는) 이 물품을 2월 23일까지 국내 반입하겠다며 반정부 전날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우파는 마두로 정부의 통치 정당성을 흔들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매점매석과 투기를 일삼아 서민 경제 파탄을 부추겨 왔다. 이들의 '인도주의'는 역겨운 위선이다.

이 대목에서 일부는 중국이 '인도주의' 운운하는 미국에 불쾌함을 표한 것을 높이 사기도 한다. 실제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 보유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와 관계를 긴밀히 맺어 왔다.

열강의 셈법 안에는, 우파가 승리해 모든 친서민적 성과를 되돌리면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고려는 없다. 한 편(미국)의 제국주의를 다른 편(중국)의 제국주의로 견제할 수 있다고 봐선 안 된다.

김준효

이해관계

이 관계는 중국에 유리한 것이었다. 외채 현물 상환 덕에 중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국제유가보다 싼값에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우파 정부들에도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맺어 왔다. 최근에는 고강도 긴축으로 악명 높은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와 9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기도 했다.

중국이 마두로 정부의 외채 상환 능력을 우려해 과이도 측과 협상에 나섰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2월 12일자 보도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중국은 다음 날 이를 "가짜 뉴스"라며 부정했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경쟁은 2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정치 세력과 다양한 방식으로 밀접하게 접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를 서방이 강력 지원하는 지금 중국은 아직 남은 외채 200억 달러 회수 등 잇속을 두고 고민에 빠질 법하다. 그러나 그런 셈법 안에는, 반동적 우파가 승리해 차베스 집권 이후로 성취된 모든 친서민적 성과를 되돌리면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고려는 없다.

한 편(미국)의 제국주의를 다른 편(중국)의 제국주의로 견제할 수 있다고 보면 이런 점을 놓칠 수 있다.

마두로 정부에 오늘날 위기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이에 관해서는 왼쪽 기사를 보시오), 평범한 베네수엘라인들이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를 규탄하는 대중 운동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좌파는 미국과 서방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규탄하고, 베네수엘라 대중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우파를 좌절시키기를 바라야 한다.

김준효

대규모 인력 감축, 노동자 고통 낳을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중단하라

박설

설 연휴 직전에 전해진 청천벽력 같은 소식 지난해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올해는 대우조선 매각.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이 또다시 노동자들을 고통에 내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에 팔을 걷어붙였다. 2월 12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최종 인수 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제 최종 심사를 거쳐 3월 초에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대우조선은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소유한 국유기업이다. 지난 20여 년간 몇 차례나 매각설이 제기되곤 했지만, 워낙 덩치가 큰 데다 조선업 위기까지 겹쳐 번번이 협상이 실패했다.

그런데 이번 매각 협상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지난 몇 달간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막후에서 현대중공업 사측과 직접 접촉하며 협상 조건, 방식, 정책 지원 등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인수에 소극적이었던 현대중공업도 생각이 변해 온 듯하다.

실제로 정부가 현대중공업 측에 제시한 인수 조건은 가히 파격적이다. 현대중공업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대우조선을 손에 넣게 된다.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한테 인수대금을 받기는커녕 현대중공업그룹이 1대 주주인 통합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지급받기로 했다. 게다가 그 주식 가치는 2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헐값이다.(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 자금만 10조 원 이상 된다!)

시장 경쟁력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에 이토록 공을 들인 이유는 조선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위해 급진적인 기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매각은 한국 조선업을 빅3 체제(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에서 빅2 체제로 재편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무성했는데 실제 추진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

이번 매각-인수합병이 노리는 바는 명확하다. 세계 1위, 2위인 두 기업을 통합해 저가수주 경쟁을 줄이고, 인력 · 비용 절감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방안'에서 대형조선소의 M&A(인수합병), 대우조선 매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과 일본, 유럽 등의 경쟁국들이 기업 통폐합,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맹렬히 쫓아오고 있다면서 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준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서도 부품사들의 인수 · 합병(M&A) 등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런 산업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인력 구조조정, 임금 · 조건 하락 등을 동반한다. 산업 구조조정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바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더 효과적으로 쥐어짜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 법률적으로 봐도 매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업 회생 과정이므로, 이를 위한 끔찍한 노동자 희생이 전제되기 일쑤다.

인력 구조조정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다.

당장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상선 · 플랜트 · 특수선 등 겹치는 사업분야가 많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설비 축소, 인력 감축, 전환 배치, 외주화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예컨대, 수주가 바닥인 해양플랜트 부문이나 사무 · 연구직을 일부 통폐합하거나, 외주화 · 전환 배치 등으로 유연성을 높이려는 공격이 벌어질 수 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지난해에 '이제 더는 못 빼앗긴다'며 임금 회복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는데, 이런 열망이 짓밟히고 임금 · 조건 하락 압박을 받게 될 공산도 크다.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더블스타에 매각됐을 때도, 고용을 3년 보장하는 대신 성과금 반납, 임금 3년 동결, 각종 복리후생 삭감 · 종결 등 끔찍한 희생이 강요된 바 있다.

이런 고통 전가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현대중공업 특수선 부문 노동자들은 기술경쟁력이 더 뛰어난 대우조선으로 편입되거나 인력 감축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몇 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듯, 현대중공업 사측은 애당초 자기 노동자들에 대한 신의 따위도 없다. 오히려 인수합병을 기회로 고용을 위협하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임금 · 복지 삭감, 비정규직화와 외주화 확대 등을 밀어붙이려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조정은 연관 산업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우조선은 지역의 여러 중소 협력업체들의 부품 공급에 의존하는데, 대규모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협력업체 노동자 · 가족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파업 결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매각-인수합병 추진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정당하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는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투쟁을 예고했다. 대우조선지회는 2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매각 반대 파업을 결의하고, 18~19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거제 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도 최근 대책위를 구성하고 투쟁 지원을 시작했다.

경제 위기 하에서 조선업 노동자들이 싸울 힘을 잃었다는 항간의 주장과 달리, 노동자들은 상당한 투쟁 잠재력이 있다. 특히 상선 수주가 늘어난 조건을 이용해 파업과 점거 등에 나선다면 정부와 사측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더구나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양보교섭으로 일관하던 집행부를 좌파 집행부로 갈아치우고 파업에 나서는 등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왔다.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운다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광범한 노동계급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달간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은 빠르게 확대돼 왔다.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부결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대우조선 매각은 이런 노동자들의 불만을 더한층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 투쟁을 단지 해당 노동자들이나 지역의 투쟁으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구조조정과 임금 · 조건 공격에 나선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대정부 정치투쟁을 조직해 맞서야 한다.

일자리 보호 위해 영구 국유화하라

금속노조와 대우조선 ·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바르게 정부의 매각 방침에 반대한다.

다만, 노조 지도자들은 "일방적" 매각에 반대한다며 전제를 달고, 노조가 참여하는 '매각협의체 구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지회 집행부는 이를 통한 "바람직한 매각"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매각은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붙박이장처럼 따라 붙는다.

더구나 이번 매각은 정부가 이윤에 눈 먼 민간자본에 기업을 팔아넘기는 것이다. 노동 친화적인 매각은 있을 수 없다. 노조가 매각 협상에 참여한다 해도 양보 압박만 받기 십상일 것이다.

노동운동은 매각 자체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대우조선을 영구 국유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대우조선은 이미 공적자금이 10조 원 넘게 들어간 정부 소유 기업이다. 이를 영구 국유화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정부의 결단을 강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더구나 정부는 대우조선의 위기를 만든 책임도 져야 한다.

물론, 지금도 대우조선은 사실상 국유기업이 아닌가, 그런데도 노동자들이 끊임없는 구조조정에 시달리지 않았는가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만 봐도, 노동자들은 대대적인 인력 감축(비정규직 해고 포함), 외주화, 연속된 기본급 동결, 임금 · 성과급 반납 등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국유화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국유화, 영구 국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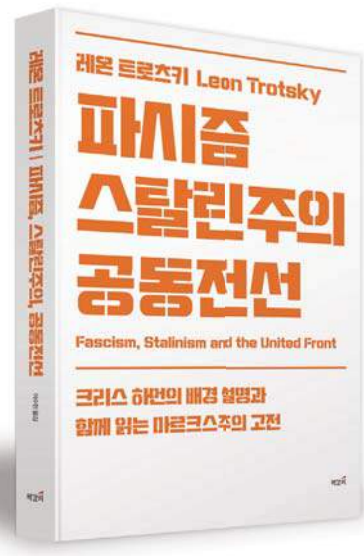
대우조선은 1999년 법정관리 때부터 지금까지 '일시 국유화' 상태였다. 이 기업의 경영 목표에는 항상 매각이라는 과제가 최우선으로 부여됐고, 이를 위해 수익성을 높이려면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졌다.

이런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매각을 위한 '일시 국유화'가 아니라 온전한 국유화가 필요하다. 노동운동은 정부에게 대우조선을 영구 국유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신간 서평 | 트로츠키의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 (책갈피, 18,000원)

파시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이수현 옮긴이



한국에는 파시즘에 관한 오해와 혼란이 많다. 1980년대에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군사 파쇼"라고 불렀고, 이후 김영삼 정부를 "민간 파시즘'이라고 불렀으며, 이명박근혜 정부는 "파시즘인 듯, 파시즘 아닌, 파시즘 같은 정부"라는 말장난인 듯 아닌 듯한 주장이 있었다. 또, '우리 안의 파시즘' 운운하며 운동 진영 내부의 분열과 마녀사냥 분위기를 조장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파시즘에 관한 오해와 혼란은 흔히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보우소나루가 당선하자 파시스트 논쟁이 벌어졌고, 최근 번역 · 출간된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책 《파시즘》은 트럼프부터 푸틴, 에르도안, 김정은, 심지어 작고한 차베스까지 죄다 파시스트로 몰아붙였다.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까지 지낸 올브라이트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파시스트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보면, 단지 오해나 혼란이 아니라 의도적 왜곡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신이 보기에 미국(제국주의)의 '국익'에 반하는 것은 모두 파시즘으로 몰아가는 듯하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에서 진짜 위험한 파시스트들이 발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의 국민연합, 그리스의 황금새벽당, 헝가리의 요비크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런 파시스트들에 맞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라도 파시즘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전술의 출발인데, 이것도 파시즘이고 저것도 파시즘이고 죄다 똑같은 파시즘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도통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우화도 생각난다.

프티부르주아지 대중운동

이 책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은 파시즘에 대한 제대로 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33년 1월 히틀러의 집권은 이후 15년 동안 국제 정치의 흐름을 결정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마치 1917년 러시아 혁명이 그전 15년간의 국제 정치를 결정한 사건이었듯이 말이다.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 우리는 현대사회의 세 계급 간 상호 관계 문제를 거듭거듭 살펴봐야 한다"고 트로츠키는 강조했다. "그 세 계급은 금융자본이 이끄는 대부르주아지, 두 기본 진영 사이에서 흔들리는 프티부르주아지, 마지막으로 프롤레타리아다."

파시즘은 바로 이 프티부르주아지가 심각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미쳐 날뛰면서' 다른 두 주요 계급을 모두 제압하려 하지만, 결국 프롤레타리아를 철저하게 분쇄해서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대부르주아지에게 봉사하게 되는 프티부르주아지의 대중운동이라는 것이 트로츠키의 분석이다.(〈노동자연대〉에 실린 존 몰리뉴의 글 "파시즘이란 무엇인가?"가 트로츠키의 주장을 잘 요약하고 있다.)

트로츠키가 이런 분석과 이론을 발전시킨 1930~1934년의 저작들을 두고 토니 클리프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 저작들은 역사유물론의 방법이 적용된 걸작일 뿐 아니라,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변화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고, 독일의 다양한 사회집단(프롤레타리아 · 프티부르주아지 · 룸펜프롤레타리아)의 대중심리나 히틀러 같은 개인의 구실 등을 묘사하는 데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저작들은 카를 마르크스의 가장 뛰어난 역사 저작, 즉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이나 《프랑스의 계급투쟁》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 저작들에서 "트로츠키는 상황을 분석할 뿐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행동 방침도 분명히 제시한다. 전략과 전술의 측면에서 그 저작들은 극히 귀중한 혁명적 지침서로, 코민테른 첫 4년 동안 레닌과 트로츠키가 만들어 낸 최상의 작품들과 견줄 만하다."(《트로츠키 1927~1940》, 책갈피, 19쪽)

트로츠키가 이 저작들을 썼을 때 처한 곤경을 떠올려 보면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 업적인지를 더 실감하게 된다. 1929년 초에 그는 소련에서 추방당했다. 유럽의 어느 국가도 그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그는 터키의 이스탄불 근처 섬에서 이후 5년 동안 갇혀 지내야 했다. 당시 독일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그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독일에서 발행된 지 1주일 만에 도착하는 신문들과 간간이 받아 보는 지지자들의 편지뿐이었다.

그런데도 "트로츠키는 독일 상황을 다룬 가장 뛰어난 기사 · 논문 · 책을 썼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지은이가 사건 현장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나날의 우여곡절을 추적해서 글을 썼다는 점이다." 당시 "트로츠키가 쓴 저작들을 읽어 보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마치 지은이가 독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터키의 프린키포섬이 아니라 독일 현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전략과 전술

물론 지금 돌이켜 보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나 트로츠키 스스로 나중에 포기한 견해들도 들어 있다. 예컨대, 당시 트로츠키는 소련의 스탈린 체제가 평화적 개혁을 통해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할 수 있다고 봤지만 몇 년 후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또, 경제 위기에 빠진 독일이 소련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논리와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분명히 드러나는 스탈린 체제 관료들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면 그것은 가망없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트로츠키가 다룬 훨씬 더 많은 쟁점들은 여전히 적절하고 유의미하다. 예컨대, 중간주의나 초좌파주의 같은 당과 계급의 관계 문제나, 노동자 민주주의, 파업 전략 등도 있고, 무엇보다도 파시즘의 본질과 반파시즘 투쟁 전술로서 공동전선 문제가 그렇다.

단지 독일뿐 아니라,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험 등도 일반화해서 제시하는 분석과 전술은 말 그대로 무릎을 치게 만든다. 그러나 독일에서 파시즘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트로츠키가 거듭거듭 주장하고 제안한 노동계급 정당들(사민당과 공산당)의 공동전선은 실현되지 않았다. 결국 "독일 국내의 세력들이 제때 히틀러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불과 몇 년 뒤에 유럽은 다시 전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트로츠키의 예측이 비극적으로 들어맞은 것을 보노라면 정말이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현재는 과거가 누적된 결과이므로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개척하는 실천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거의 90년 전에 쓰인 글들을 모아 놓은 것이지만,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혁명적 전술을 가다듬는 데 필요한 통찰과 이론이 담겨 있는 중요한 책이다.

지금은 절판된 《트로츠키의 반파시즘 투쟁》(풀무질, 2001)도 당시 트로츠키가 쓴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지만, 1931년 말까지의 상황을 다룬 글이 마지막이었다.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은 그중에서 몇 개가 빠졌지만, 1933년 히틀러 집권 이후의 상황까지 다룬 글들이 추가됐고,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스티브 라이트의 머리말과 각각의 글에 대한 크리스 하먼의 배경 설명이 실려 있어 더욱 유익하다.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양효영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추락하자,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12월 10일~14일, 2509명 대상)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은 29.4퍼센트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이들의 부정평가는 64퍼센트로 가장 높았다(평균 부정평가 46.8퍼센트, 긍정평가 48.4퍼센트).

리얼미터는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63.5퍼센트로 높았다며 이런 현상을 '젠더 갈등'으로 설명했다. "남성과 여성 간 혐오, 즉 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우파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문재인에 실망한 20대 남성을 포섭하겠다고 "워마드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역겹다. 문재인이 실질적인 친여성적 정책을 편 것도 없는데, 젠더 갈등과 문재인 지지율을 연동시키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그러나 20대 여성의 문재인 지지율이 20대 남성과 차이가 있지만 **20대 남성과 거의 유사한 지지율 등락을 보여 왔다.** 20대가 성별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평가했다면 지지율 등락은 상반돼야 할 것이다.

한편, 일각에선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을 20대 남성이 보수화한 결과라고 본다. 많은 언론들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을 지냈던 이근형 씨 등이 이런 주장한다.

그러나 문재인에 실망했다고 20대들이 곧장 보수화됐다고 이끌어내는 건 논리 비약이다. 실증적으로도, 청년층에서 보수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2018년 5~6월(20대 84퍼센트, 20대 남성 79퍼센트)과 지지율이 하락한 11~12월을 비교해봐도 20대 전체와 20대 남성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각각 1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무엇보다, 20대 보수화 주장은 '문재인 지지는 진보고 문재인 반대는 보수'라는 잘못된 이분법에 근거한 것이다. 민주당 정부의 개혁 염원 배신 때문에 낮아진 지지율을 20대의 의식 탓인양 몰아가는 억지다.

피상적

물론 20대 남성의 낙폭이 좀더 큰 것은 문재인에 대한 이들의 기대가 더 컸거나, 정치적 경험이 적은 20대 특유의 성급함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만을 떼어내서 강조하는 주류 언론들의 관점은 피상적이다. 오히려 지난 1년간의 문재인 지지율 추이를 보면 **모든 연령, 성별에서 하락세**가 나타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와 배신에 따른 진보층의 지지 철회가 두드러진다. '촛불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표상됐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지난 2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실망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의 20대 남성 심층 인터뷰 중 "당장 삶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는 기대에 조금도 부응하지 못했다"는 말이 청년층의 심경일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취임 직후(2017년 5~8월) 동안 20대 남성 지지율은 80퍼센트 중후반 대를 유지하며 평균 지지율을 웃돌았고 30대 남성, 40대 여성 등과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갤럽 조사).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 청년들의 조건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우파 정부 때와 다를 바 없는 청년 정책만 내놨다. 청년 실업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청년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받았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청년들이 여전히 끔찍한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문재인의 친기업 행보 가속화 때문에 **지지율이 성별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져 왔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경제 상황이 여전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 서민에 대한 공격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이 결정된 것도 기층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연령대에서 지지율은 더욱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큰 맥락을 보지 않은 채, 남성 지지율만 떼어놓고 보면 온갖 아전인수격 해석이 생겨난다. 마치 20대 남성은 별세계에 사는 양 다른 세대 · 성별과의 격차를 과장하며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파들이 문재인에 대한 실망감을 아전인수해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문재인 왼쪽에서 진정한 진보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진보 · 좌파와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폭로하고 맞서면서 청년층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연대 wspaper.org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을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5만 원, 2년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

단호한 점거 파업과 학생들의 연대로 승리를 거두다

양효영

2월 12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단호한 점거 파업으로 학교 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2월 7일 기계실 4곳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한 지 6일 만이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복지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대 당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시설관리 용역 파견 노동자 76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월 12일 학교 측과 노동조합은, 기계 · 전기분회 조합원의 기본급을 노조가 요구한 시중노임단가(약 250만 원)에 근접하게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서울대 기계 · 전기 노동자들의 임금은 약 200만 원으로, 다른 국립대나 사기업보다 매우 적었는데 이번 합의로 비슷한 수준이 된 것이다.

또, 이번 합의로 서울대 당국은 정액 급식비 월 13만 원, 맞춤형 복지비 연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소 · 경비 조합원에겐 상여금을, 기계 · 전기 노동자들에겐 매년 명절 휴가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정부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수준의 복지조차 전혀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노조는 이 수준의 복지혜택(정액 급식비 13만 원, 맞춤형 복지비 40만 원, 명절 휴가비 80만 원)을 요구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노동자들은 2017년 임금 총액 대비 약 20퍼센트의 임금 인상을 성취한 셈이다.

합의안은 13일 조합원 총회에서 96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찬성 255표 반대 8표). 노동자들은 만족하고 기뻐하는 분위기다.

처우 개선

이번 투쟁은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화나 자회사 전환)이 됐지만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천공항과 파리바게뜨 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자회사 ·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들의 조건은 비정규직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이런 불만족스러운 조건을 담대하고 단호한 투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추운 겨울 점거 파업으로 학교의 주요 건물들의 난방이 중단되자, 여기저기서 불편함들이 터져 나왔고 학교 당국은 난방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난방을 중단하는 건물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학교 당국을 압박했다.

학교 당국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시킬 수 없도록 노동자들이 기계실을 점거한 것도 파업 효과를 높혔다. 이번 파업은 노조 설립 이후 기계 · 전기 노동자들이 벌인 첫 파업이었는데, 노동자들은 집에도 거의 가지 않고 굳건히 파업 대열을 유지했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도 효과적이었다. 노동자들은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파업 지지 호소 성명서를 부착했다.

사진 제공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파업 노동자들을 방문해 연대 물품을 전달하는 서울대 학생들

"우리 노동자와 학생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의 양대 주체임을 확인합시다. … 학생 동지 여러분에게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노조 성명서 중)

또한 노동자들은 오세정 신임 총장의 취임식 때 팻말 시위를 벌이며 학교 당국을 압박했다.

우파들이 이를 이기적 파업이라고 비난하고 서울대 당국이 "불법" 운운했지만, 굳건하게 점거 파업을 이어 간 것이 결국 서울대 당국을 물러서게 했다.

학생들의 연대

이와 함께 학생들의 연대도 투쟁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중앙도서관 등 건물의 난방이 중단되고 총학생회가 노조에 난방 재개를 요구하자, 우파들은 노조가 "학생들의 미래를 인질로 투쟁"한다고 비난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잘 먹히지 않았다. 학생들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면서 분위기가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사회적인 여론도 시설 관리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이었다.

학생들은 파업 노동자들의 호소를 담은 영상을 배포하고, 이후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려 점거 농성장 지지방문, SNS에 파업 지지 릴레이 선언 하기, 학교 당국에 항의 전화하기 등을 호소했다.

사회대 학생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 사회학과/악반 학생회 등 학내 단체들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도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연대 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는 노동자들에게 큰 자신감을 줬다. 부적절한 입장을 취했던 총학생회도 입장을 파업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꿨다. 총학생회는 2월 11일 아침 총장 출근에 맞춰 공대위와 함께 팻말 시위를 벌였다.

총학생회가 파업 지지 입장으로 선회하자 서울대 당국은 개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어 봤자 학생들의 연대가 확대되는 등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빠르게 한 발 물러났다.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무늬만 정규직화"에 맞서 다른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고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연대가 뒷받침되면 투쟁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준다.

이런 고무적 성과가 다른 곳으로도 확대되길 바란다.

서평 |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노동의 실상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책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 허울 좋은 포장지였다. 정부 출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은 기업 이윤 추구에 꽃길을 깔겠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는 진정한 노동 존중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준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겨레〉 기자들이 직접 노동 현장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노동 현장의 언어로 현장감 있게 상황을 묘사한다. 중간 중간 유머러스한 만화도 있어 한 번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정말 알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놀랐고 사회에 분노를 느꼈다.

이 책은 제조업 주야 맞교대, 콜센터, 초단시간 노동(알바), 배달 대행 업체 등을 다룬다. 학생 · 청년이 많이 접하는 노동 현장이기도 하다. '나도 주휴수당 못 받았는데', '나도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제조업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모두 더 빨리 더 많이 성과를 내라는 압박 속에서 착취당한다.

모두들 열악한 노동 환경, 살인적 노동 강도, 심각한 스트레스에 몸과 정신이 무너져도 내일이면 다시 출근한다. 출근하지 않으면, 내일의 삶을, 다음 달의 삶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각자 고용 형태는 달라도, 말 그대로 무엇 하나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기계"라고 부른다.

기계 부품

주야 맞교대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맞춰 일한다. 머리가 아닌 손으로 일한다. 기계를 만지는 '언니'(노동자들이 서로 부르는 호칭)들은 대부분 작업 속도를 조정할 줄 몰랐다. 사용자가 설정한 속도 그대로 일한다. '언니'들의 삶마저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의 속도에 맞춰진다.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의 부품처럼 된다.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노현웅 등 지음, 이재임 그림,
철수와영희, 292쪽, 17,000원

이 책은 콜센터를 "화이트 팩토리"라고 부른다. 사무실 노동도 본질적으로 공장 노동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 감시당하며 일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두고 "닭장"에서 일하는 것 같다고 한다.

이 책은 새롭게 등장했다는 '플랫폼 노동' 현장도 다룬다. 이 책에 나오는 플랫폼 노동 현장은 언론과 정부의 말과 크게 다르다.

배달 대행 업체의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위탁 계약을 맺는 디지털 특수 고용 노동자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업체들이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한다. 사실상 업체의 직원인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력 상실 속에서 경쟁과 위험의 질주로 내몰리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150여 년 전 마르크스가 노동자의 삶과 노동에 대해 묘사한 말들이 떠올랐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말이다. 이 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마르크스주의가 여전히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노동자의 삶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특히 임금 인상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노동 조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살려면 잔업과 특근이 많은 일터로 노동자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서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개악하고 탄력근로제를 강행하려 한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더 낫게 만들길 소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대화하고 싶다.

신정 서울시립대 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